



2024.8.19.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05호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8월 19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2	02	05	03	08
대외 환경의 급변		국내 대응의 조건과 한계		대안①: 사회적 전환을 창조할 예찰 인재육성 체계	
03	14	04	17		
대안②: 국회 미래위원회와 정부 미래세대부 신설		결론			



요약

■ 2030년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 도래

- IPCC “2030년대 1.5°C 상승”, 지구 생태계 유지하는 9개 시스템 중 6개 기준선 침범
- 극우파 정치세력의 에코파시즘(ecofacism) 부각 가능성
- ChatGPT로 현재 직업의 69.3%가 영향을 받을 것(32.8% 강한 영향, 36.5% 부분적 영향)
- 미국과 중국의 新냉전체제 시작,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참전 가능성 제기

■ 국내 대응의 한계

-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뿐 아니라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 확대
-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치사회의 부재로 선거국면에서 급조한 정책만 양산
- 기후위기, 탈탄소, 세계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 복합 위기에 시민단체들의 무기력화

■ 사회적 대전환을 창조할 예찰 인재 육성의 필요

- 글로벌기업들도 앞다퉀 ‘미래예측력’을 갖춘 인재 육성
- 美 하버드대학의 최장기 종단연구에서 예측력을 성공의 중요한 적응기제로 꼽음
- 미래예측의 과정에 참여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아효능감이 높음
- 지자체와 지역사회, 대학, 지역연구원을 연계한 미래예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개인의 예측력을 높이는 공공 프로젝트를 확대, 다양한 공동체에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분위기 조성

■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 다중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미래위원회 설립
- 중장기적 시각에서 복합위기에 대응하며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미래세대부 설립
- 시민사회는 정례적으로 미래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요구

01

대외 환경의 급변

■ 2030년 세계적 대전환의 서막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결론 “2030년대 1.5°C 상승”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10년 안에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를 놓친다.”¹⁾
 - 1.5°C 상승하면 가뭄과 폭우 2배 증가, 2°C 상승하면 54% 생물종 멸종, 더위와 가뭄으로 7억 명은 극한 빈곤으로 몰리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빈발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까지 1년에 한 번꼴로 1.5°C 상승할 확률 66%
-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9개의 시스템 중 6개가 기준선 침범(2023년)
 - 생물권 온전성(biosphere integrity) 약화로 800만 종의 식물과 동물 중 100만 종이 멸종 위기, 지난 150년 동안 식물과 동물의 유전적 다양성의 10% 이상이 유실되어 환경변화 적응에 그만큼의 위험도 증가(Richardson, et. al., 2023)
 - 미세 플라스틱, 내분비 교란 물질, 유기 오염 물질 등은 인간의 개입(핵폐기물이나 핵무기 개발에서 활용된 방사성 물질 등의 생산)으로 발생
 - 담수의 변화, 산림 벌채, 화학물질의 생태계 교란은 지구의 생태경계선 침범한 지 오래
 - 인간 행동의 결과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망, 이를 일상에 내재화해야 함
- 에코파시즘(ecofacism)의 부상 가능성
 - 에코파시즘은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 생태계 악화,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심화 등과 겹치면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할 이념의 하나로 활용(Zimmerman, 1995)
 -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자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전멸이라는 위기감에서 다시 등장
 - 예를 들면, 극단적 동물권 옹호론자들에게 인간의 혐오 징후가 보임

1) 신혜정. (2023년3월20일자). “기후위기 시한폭탄 짹짹...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으로 줄여야. 한국일보

- 203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애초 약속한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떤 이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으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음
- 나치 독일처럼 극우파 정치세력이 자국의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이민자, 인종, 종교, 계층적 차별을 자행할 수 있음²⁾

■ 새로운 지적 존재의 등장과 인간의 일자리 감소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체 직업 중 3분의 2에 영향을 줄 것³⁾
 -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행정업무 46%, 법률업무 44% 사라질 듯” 주장
 - 긍정적 변화로는 AI 활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세계 GDP 7%(7조 달러) 증가, 생산성 1.5%p 증가 가능성 제기됨
 - 디지털 보조 엔지니어, 창고 로봇 기술자, AI 마케팅 전문가 등 신직업 등장
 - ChatGPT의 기능 강화로 32.8%의 직업은 강한 영향(full impact)을, 36.5%의 직업은 부분적 영향(partial impact)에 놓일 것으로 전망(Zarifhonarvar, 2023)
 - 특히 만들고(making), 제공하며(providing), 조언하며(advising), 계획하기(planning)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직업은 ChatGPT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ChatGPT에 대체될 임무나 역량 중에 예측하기(forecasting)는 아직 없음

- 기계 유용성 vs 기계 지능
 - ‘기계 유용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계와 알고리즘을 인간의 역량을 보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권고
 - ‘기계 지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역량이 약화하고, 인간의 일이 대폭 대체될 것으로 우려
 - 최근 연구 경향은 새로운 기술에 인간이 가진 전문성이 결합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
 - ChatGPT와 대화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이 높은 개인들이 훨씬 큰 효과를 경험
 - 사회가 기계 유용성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려면 노동자에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의 공유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할 제도와 규범의 제시 필요(아세모글루와 존슨, 2023)

2) Zimmerman은 1995년 글에서 “유럽의 극우 파시스트들이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땅과 물, ‘피(native blood)’까지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고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www.goldmansachs.com

-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 부재
 - 미중 공생에서 미중 갈등으로
 -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은 세계자유무역 질서로 진입, 미국은 중국에 최혜국 대우
 - 2000년 중반까지 중국은 미국에 무역 흑자 → 미국은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 → 중국은 미국의 국채 매입 → 미국의 성장세 지속(홍호평, 2022)
 -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로 당과 국가 자본주의의 갈등
 -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권위가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 2012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장기집권화 추진
 -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가시화, 미국이 중국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시각 부상
 - 2013년 중국의 화웨이, 미국 정부기관 조달업체에서 배제, 2020년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확대, 신냉전체제의 시작
 - 중국이 대만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의 참전 가능성 제기

02

국내 대응의 조건과 한계

■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

○ 초저출생, 비혼과 비출산의 지속

- 합계출산율은 201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15년 1.24, '16년 1.17, '17년 1.05)⁴⁾
-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서울은 0.53명(전국 최저, 사상 최저)
- 한국의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의 정점을 지나 '21년부터 감소(5,174만 명)
- 2060년 3,500만 명에서 2100년 1,300만 명으로 감소 전망(코나아이, 2022)
-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과 박선권(2024)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 미래 시나리오의 경우 2123년 한국 인구는 514만 명으로 감소, 현재 인구의 9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초고령화, 이들을 미래에 누가 돌볼까?

-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이미 지역별로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등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인 부산(21.0%)까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

○ 1%대 경제성장, 그 다음은?

-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하락(김세직, 2021)
- 대통령의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하락,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의 양적 성장 어려움
- 내수시장의 쇠퇴는 외부 변수(외자 유입, 금리 변동 등)의 변화에 휘둘릴 가능성이 확대됨을 의미
-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대외신인도 증가, 국내 경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은 64개국 중 28위)
-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들로 내수시장 규모, 노동력, 산업경쟁력도 있지만, 불공정 거래나 양극화, 불평등 심화, 소득 격차도 중요한 요인

4) 2015년을 전후로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출산율 급감의 동인을 찾는 데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1) 2013년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하락(일자리 감소) 2) '비혼' 키워드는 2015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전국 11대 일간지 키워드 분석), 여성의 합계초혼율도 2015년 이후로 급감(15년 70%, 21년 46%)

■ 분야별 현재까지 한국의 상황(박성원 외, 2022)

- [관계] 단기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에 집중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 남녀 임금 격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 1인당 주거 면적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소득 하위계층 자가보유율 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 심화**는 부정적
- [노동] 시민들의 주관적 사회이동성 인식은 지속 하락, 하도급 기업의 원사업자 의존도 심화,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 심화**
- [경제] 미·중 대립의 격화, 세계화 주춤, **경제불평등 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술의 인력 대체 강화 등 경제의 내외부 환경에 불안 가중**
- [정치] **국회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제시 등 시민의 직접행동 증가,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의 의사결정 참여, 자기표현의 중시 강화
- [국제] 국력에 기반한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규범적 리더십 발휘 공간 확대되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불안정성 속에서 대내외적 도전이 예상, 이 때문에 **국력 지속 상승과 평화안정 위협 가능**

■ 한국의 정치사회 약화

-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치사회의 부재
 -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통치론’에서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강정인, 문지영, 2022)
 - 로크는 자연상태나 절대군주제에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공동체’(commonwealth, 지금의 국가)에 가입하고 위법의 처벌권을 위임하는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고 강조
 - 미국은 건국 초기에 로크의 사상을 헌법으로 명문화,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정당의 출현을 목도,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음(Goertzel, 2010)
 - 정당,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활동가 그룹 등이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들이며, 정치사회는 시민사회가 국가에 요구하는 의제를 모으고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조직으로 변화
 - 한국의 경우, “이념적 혹은 가치적 수준의 프로그램이 없으며 정당 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선거국면에서 공약을 위해 급조한 정책들을 쏟아내기에 바빴”(조대업, 2008)
 - “최근 12년간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25~35% 중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약 10~15%...(그러나) 진보정당들의 분열과 행태에 대한 누적된 실망 때문에, 또 거세지는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로 인해, 그리고 선거 때 후보 숫자가 적다보니, 점차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안성용, 2024)
 - 이런 현상들은 한국에 정치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

■ 시민사회단체들의 갈등과 방향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 촛불시위 이후 하락 추세
 - 흩어진 개인들이 소통과 공감으로 연대해 나선 미투 운동, 갑질 저항, 비리 고발 등 '생활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뢰도 악화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19~2023년까지)에서 시민단체 신뢰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를 합해 44.1%, 2020년 46.7%, 2021년 53.4% 상승했으나 2022년 이후 48.8%, 2023년 43.6%로 다시 하락
 - 보수나 극우 시민단체의 대거 등장으로 시민단체 사이의 맞불 집회 등 심각한 대립과 갈등 탓에 일반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를 머뭇거림
 - 기후위기, 탈탄소전환, 글로벌 경기침체, 인구감소, 가족해체 현상 등의 복합 위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부와 소통도 못 하면서 무기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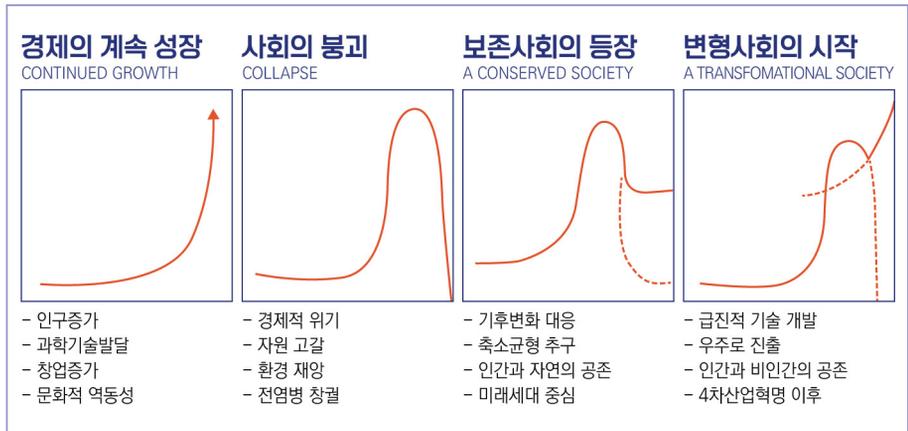
03

대안①: 사회적 전환을 창조할 예찰 인재 육성 체계

■ 대한민국 앞에 놓인 대전환의 국면

- 기후위기의 심화, 인공지능의 급진, 국제사회의 불안, 정치의 역할 부재 등으로 시민들은 아래 4가지 미래상 중에서 '사회의 붕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⁵⁾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전문가 곽상만 박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붕괴'라는 책을 펴내면서 2022년을 붕괴의 원년으로 지목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인구감소였음

그림 1 다가올 4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요인들 (박성원, 2019)



- 사회의 붕괴를 막으려면 이전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불가하며, 새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함
 - 새로운 미래상으로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림1]에서 보존사회와 변형사회
 - **보존사회**는 과거의 양적 투입의 경제개발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해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1970년대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성장의 한계', 2015년 파리의 기후협약 등은 이 미래를 향한 전 지구적 전략이었음

5) 박성원. (2023).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국가미래전략 제75호, 국회미래연구원. 이 문헌 외에도 박성원이 미래대화를 진행한 다양한 시민들, 사회활동가들, 청년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서도 '이대로 한국이 간다면, 붕괴의 미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응답함(박성원 외, 2023).

- **변형사회**는 과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의 사례처럼, 기술 낙관론자들과 정치적 개혁주의자들의 신세계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공학 등이 융합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새로운 사회가 창조되고 있음을 주장
- **대전환은 한국사회가 보존사회로 가느냐, 변형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시사**
 - 새로운 미래상을 창조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미래상이었던 '경제의 계속 성장'의 틀에 갇혀 붕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
 - 지금 우리사회가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동기와 에너지가 생김

■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예찰 인재의 양성

○ **예측 역량은 왜 필요한가?**

- BP, Apple, Boeing, Microsoft, Johnson & Johnson 등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 역량 분석 결과 '미래예측력'이 주요한 역량으로 꼽힘(박가열 외, 2018)

※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이 직원 채용할 때 주로 묻는 예측 역량 테스트 사례

- “10년 후,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는가?”
- “당신이 하는 일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까?”
-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가?” 등

- 한국고용정보원은 8대 혁신성장산업⁶⁾ 전문가 2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미래직업능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미래예측력'이 선택되었으며, 이 역량은 현재의 필요도와 현재의 보유도 격차가 가장 높았음
- 현재 이 능력을 갖춘 인재는 없지만 앞으로 매우 필요할 것이란 점을 시사

○ **미국 최대 종단연구 '하버드대학의 그랜트 스터디(Grant Study)'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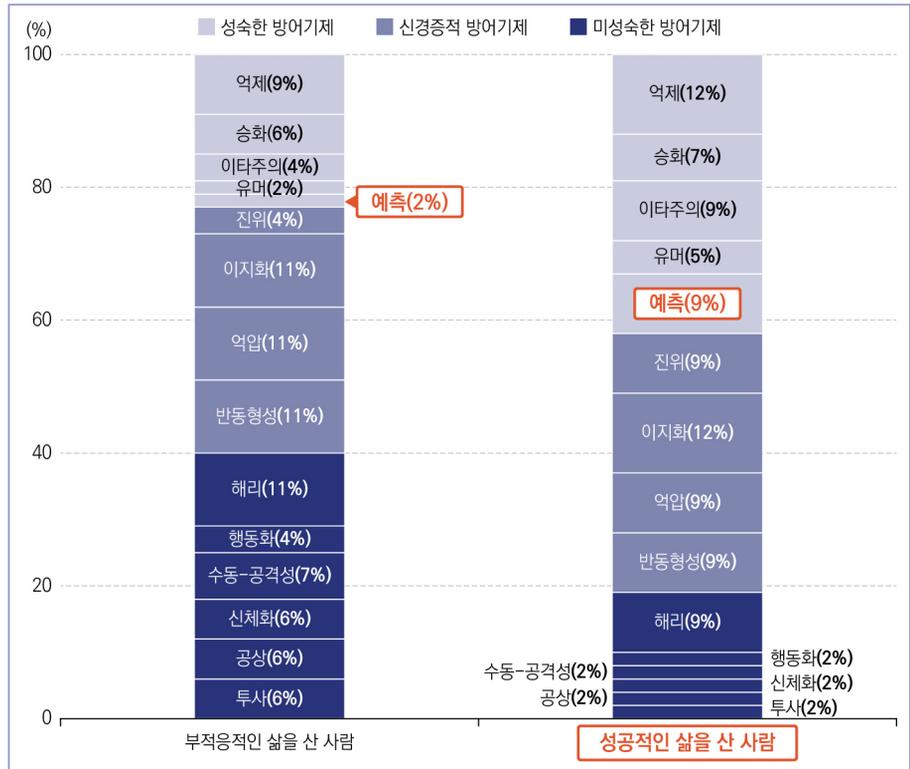
- 1939년 하버드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성인의 육체와 정신건강' 연구는 지금까지 하버드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된 가장 오래된 종단연구임
- 이 연구의 오랜 책임을 맡은 정신과 의사 베일런트(Vaillant) 박사는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이 다양한 좌절에 어떻게 적응(defense mechanism)했는지 조사한 결과, 이타주의(공감능력), 예측(anticipation), 억제(감정적 충동의 연기), 승화, 유머가 중요했음을 밝힘⁷⁾
-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적응기제는 회피, 해리(dissociation), 공상, 수동-공격성 등의 미성숙한 적응기제와 달리 '성숙한' 적응기제로 평가

6) 8대 혁신성장산업군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

7) <https://www.6seconds.org/2021/04/19/harvard-grant-study/>

- 이들 중 예측(anticipation)은 “예견되는 갈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거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한발 앞서 마음속으로 대비”하는 활동을 의미함
- [그림2]에서 예측 활동은 성공한 사람의 경우 9%를 사용하는 반면, 부정적 삶을 산 사람들은 2%에 불과해 두 그룹 간 격차가 가장 큰 적응기제로 꼽힘

그림 2 하버드대 연구, 성공한 사람들의 적응기제 분포도



(출처: 고영건, 2015)

○ 미래에 관한 자아효능감 연구(Par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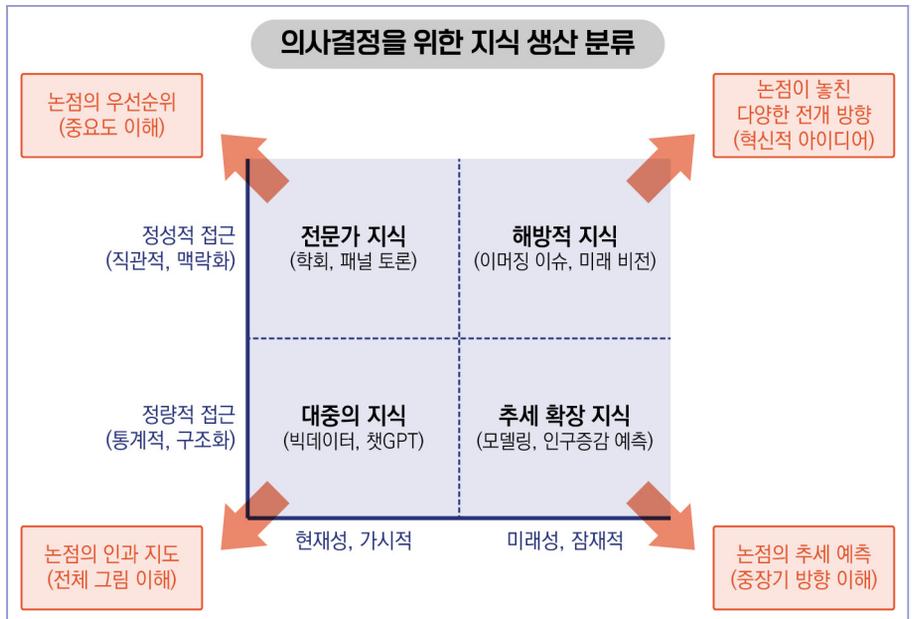
- 미래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towards Futures)은 ‘어떤 미래가 와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
- 미래예측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래의 자아효능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관찰
- 미래 자아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미래에 맞는 언어를 생성하며, 사회의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타인과 함께해나가는 역량이 있음
- 선호하는 미래상이 있는 개인은 예측 외에도 하버드 그랜트 스터디에서 언급한 공감, 억제, 승화, 유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찰 인재가 창조할 지식의 영역**

○ **예찰 인재와 다른 인재와의 차이**

- 예측 역량을 갖춘 인재는 대중적 지식, 전문적 지식, 추세외삽적 지식 외에도 ‘해방적 지식’ emancipatory knowledge) 창조에 관심이 더 높음(박성원, 2024a, 그림3 참조)
-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이 해방적 지식인데, 현재 사회에서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이슈를 담고 있음
- 해방적 지식의 창조는 미래학이 추구하는 목표로 이머징 이슈 분석(emerging issue analysis), 미래 시나리오, 대안 미래상 연구(alternative futures) 등의 방법론을 활용
- 예를 들어 이머징 이슈 연구는 표면적 변화가 아닌 질적,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미래 이슈를 찾아내는 연구이며, 변화를 보는 관점의 전환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론을 내포함
 - 이머징 이슈의 예로는 1970년대 탈산업사회, 인터넷 등장이나 1990년대 세계화와 가족의 해체, 2000년대 사이버 불링, 감정노동의 번아웃, 2020년대 에코 파시즘, 알고리즘 국가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3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지식



(출처: 박성원, 2024a)

■ 예찰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역사회를 엮는 사회 전환 프로그램 필요

- 선행적 실험들(미우라 히로키, 김의영, 2020)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 서울시 소재 17개 대학에서 32개 수업을 개설하고 지원
 -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년 도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지역 연계 수업 지원, 학생들의 연구결과를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발표
 - 전라북도는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 지역내 6개 대학 학생의 성과 보고 개최
 - SK그룹(행복나눔재단)은 2013년 KAIST에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개설
-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개발
 - 예측 수업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지역정부에 제안하는 과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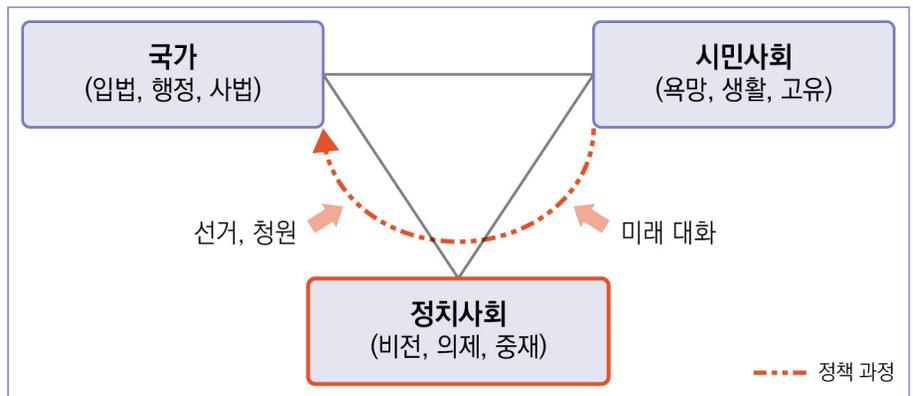
■ 지자체와 지역연구원의 협업으로 시민 대상 미래대화 프로그램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부터 시민들과 숙의토론형 미래대화를 추진
 - 중장기적 미래 변화를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하고 다가올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미래대화 프로젝트 운영
 - 2022년부터는 지역사회 시민들, 지역연구원, 지자체와 함께 미래대화를 추진, 지역별 미래 이슈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
- 부산과 인천에서 추진한 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 2023년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2024년 인천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경험을 참고하면 다른 지역 지자체와 지역연구원이 협업해 지역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개최할 수 있음(박성원, 2023; 박성원, 2024b)
 -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정례화하면 사회변화를 추동할 시민들을 육성하고 이들에 의해 미래 준비를 앞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
 - 미래대화를 경험한 시민들이 차후 미래대화를 주도할 퍼실리테이터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들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의 미래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

■ 미래예측 인재들과 함께 정치사회의 복원, 새로운 미래사회 실현

- 한 사회는 국가-시민사회-정치사회로 구성
 - 예측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미래대화를 추진(그림4)
 - 이를 통해 이해하고 확인한 시민들의 선호미래, 개선과 개혁의 사회적 의제를 분석, 이를 각종 수단(선거, 청원, 시위)을 통해 국가에 전달하고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 미래예측 인재들과 정치사회를 강화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활발히 연결

그림 4 정치사회의 역할



04

대안②: 국회 미래위원회와 정부 미래세대부 신설

■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 요구

- 저출산, 성장을 둔화, 미·중 갈등 심화, 기후위기, 감염병 등이 복합된 위기 시대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교육, 산업의 격변까지 전망
 -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동시다발적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전례 없는 위기 양상
 - 분야별 대응으로는 한계, 통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응의 필요성 증가

■ 국회는 미래위원회 신설 필요

- 미래지향성을 갖추려는 국회의 노력과 한계
 - 16대 국회,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제44조 비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미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험을 축적
 - 그러나 미래위원회는 개괄적 논의에 그치거나 짧은 활동 기간, 단절된 운영 등의 한계를 보임(조근희, 2021)
 - 19대 국회에서 원혜영 의원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김세연 의원은 '미래세대 기본법안'을 발의
 - 이를 통해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의 피해를 입게 될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 목표
 -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국회의 노력으로 평가
 - 그러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상시적인 국가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데 한계 노정
-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 상설 미래위원회 설립
 - 22대 국회에서는 상설 상임위원회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 미래전략 청취, 보완, 국민 선호미래 실현의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함
 - 국회법 제45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46조의 윤리특별위원회처럼 상설특별위원회로 논의의 체계를 격상하고 개원 직후 가동할 필요(조근희, 2021)
 - 상설 미래위원회는 정부가 지속해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추동하고 책임과 의무를 해태할 경우 질타하고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로 정부를 움직일 필요

- 장관 청문회 시 미래위원회는 정부의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추진 경험을 질문함으로써 정부가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도록 유도(Caney, 2019)
-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들의 참여로 미래위원회의 국가미래전략에 따른 법률과 예산의 심사 결과를 타 상임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시, 해당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수용하게 하는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
- 미래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위원회에 다양한 자문그룹 설치 및 운용, 분야 융합형 소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미래세대부 설립 필요

○ 정부 미래세대부처 설립안

- 지속 가능 미래, 세대 간 형평성, 중장기 미래대응을 목표로 각 부처 정책 통합
- 각 부처에 미래세대 담당관을 신설하고 미래세대부 회의에 참여
- 중장기 시각에서 인구, 교육, 복지, 기후, 기술, 주거, 환경, 도시 변화를 예상하고 이 변화들의 복합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
-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와 활발하게 협업 필요
-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발전, 빈곤화와 양극화 등 세계적 문제에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
-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차기 정부가 미래세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부처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당면할 주거 환경, 일자리, 교육, 복지,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방향을 잡아야 함

○ 영국 웨일즈 정부의 장관급 미래세대위원회 참고

- 세대간 정의(justice) 문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현세대와 그렇지 못한 미래세대의 권력 불균형에서 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누군가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법적, 제도적 과정이 필요
- 웨일즈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14년 '청소년 참여 헌장(Youth Engagement Charter)'을 선포,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며, 정책으로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2015년에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법령'(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을 제정,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장직 신설, 장기적 시각의 미래연구 및 미래 트렌드 공유, 미래 대안의 제시를 약속
- 이 법령에 따라 2016년 미래세대위원회를 신설하고 7년 임기의 위원장(장관급)을 임명, 이와 함께 청소년 의회(Youth Parliament)도 신설

- 미래세대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에 웰빙 목표 이행 요구, 이행 여부 확인/평가/조언, 정부 정책의 장기적 효과 평가,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정부의 웰빙 이행 평가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 웰빙의 7가지 목표: 번영, 회복성, 건강, 평등, 공동체, 문화, 글로벌 책임 등
- 한국에서 미래세대부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웨일즈 정부처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헌장 선포, 청소년 의회 설립 등의 사례를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

- 웨일스는 2016년 청소년 의회 설립 당시 5천 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의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세에서 18세까지 60명이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원으로 선출되었음.
- 2년 임기의 청소년 의원들은 미래세대의 처지에서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GDP(국내총생산) 같은 경제지표가 아닌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높이는 대안 지표(Wellness)의 개발 등.

- 총리실 산하에 미래대응 기구의 설치 논의도 고려
 - 최근 최기상의원실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현재 기획재정부 관장 사무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업무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사무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업무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조항을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수립'으로 개정
 - 제27조(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이라는 조항을 '경제·재정정책'으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준비

05

결론

- 2030년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 도래
 - IPCC “2030년대 1.5°C 상승”, 지구 생태계 유지하는 9개 시스템 중 6개 기준선 침범
 - 극우파 정치세력의 에코파시즘(ecofacism) 부각 가능성
 - ChatGPT로 현재 직업의 69.3%가 영향을 받을 것(32.8% 강한 영향, 36.5% 부분적 영향)
 - 미국과 중국의 新냉전체제 시작,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참전 가능성 제기
- 국내 대응의 한계
 -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뿐 아니라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 확대
 -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치사회의 부재로 선거국면에서 급조한 정책만 양산
 - 기후위기, 탈탄소, 세계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 복합 위기에 시민단체들의 무기력화
- 사회적 대전환을 창조할 예찰 인재 육성의 필요
 - 글로벌기업들도 앞다퉀 ‘미래예측력’을 갖춘 인재 육성
 - 美 하버드대학의 최장기 종단연구에서 예측력을 성공의 중요한 적응기제로 꼽음
 - 미래예측의 과정에 참여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아효능감이 높음
 - 지자체와 지역사회, 대학, 지역연구원을 연계한 미래예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개인의 예측력을 높이는 공공 프로젝트를 확대, 다양한 공동체에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분위기 조성
-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 다중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미래위원회 설립
 - 중장기적 시각에서 복합위기에 대응하며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미래세대부 설립
 - 시민사회는 정례적으로 미래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요구

참고문헌

- 강정인, 문지영. (2022). 통치론. 까치
- 고영건. (2015). 억제, 예상, 유머, 승화, 이타주의 성숙한 적응기제를 갖춘 인재가 CEO감이다. 동아비즈니스포럼 제 179호.
- 김세직. (2021). 모방과 창조. 브라이트
- 대런 아세모글루 & 사이먼 존슨. (2023). 권력과 진보: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생각의 힘
- 미우라 히로키, 김의영. (2020).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을 통한 대안적 가치 창출: 성격, 한계,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치연구 29(1): 197-226.
- 박가열 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직업능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성원. (2019). 미래공부. 글항아리
-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 전망.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3).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국가미래전략 제75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3).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4a). 2040년 서울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동향과 전망 120호, 89-123.
- 박성원. (2024b).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90호, 국회미래연구원
- 안성용. (2024). 2024년 총선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식과 실천을 모아야 할 것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회(편), 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 박영률출판사.
- 유재국, 박선권. (2024).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 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국회입법조사처.
- 조근희. (2021). 국가 미래정책과 국회 논의 경험, 발전 방안, 박성원 외,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조대엽. (2008). 운동정치의 제도화와 정당정치의 위기. 한국정치사회학회 창립기념심포지엄
-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 (2022). 대한민국의 붕괴: 인적자원으로 살려본 대한민국의 붕괴. 양서원
- 홍호평. (2022). 제국의 충돌: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하남석 옮김. 글항아리

- Caney, S.** (2019). Democratic Reform,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s of the Long-Term. CUSP
- Goertzel, Ted.** (2010). Political Society: In book: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ivil Society, pp.1248–1250.
- Park, Seongwon.**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 Richardson, K., et. al.** (2023). Earth beyond six of nine planetary boundaries. *Science Advances* 9(37): DOI: 10.1126/sciadv.adh245
- Zarifhonarvar, A.** (2023). Economics of ChatGPT: A Labor Market View on the Occupation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ZBW–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Kiel, Hamburg.
- Zimmerman, M.** (1995). The Threat of Ecofac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21(2): 207–238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